

대법 “서울시, 퇴직공무원 모임 지원은 위법”

광주·전남 의정회 지원 조례도 폐기 전망

광주시·전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특혜 논란일 듯

대법원이 5일 논란을 빚어왔던 퇴직 공무원과 지방의원 친목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해 관련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정회 지원 조례도 폐기될 전망이다.

대법원과 광주·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2002년 지방의원 출신 모임인 의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 한 차례 2000만원가량을 지원했으나 논란

이 일차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제가 됐다. 전남도의회도 1999년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만들어 2010년까지 매년 3500만원 가량을 지원했으나 논란이 일자 2012년까지 예산 지원을 하지 않다가 올해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업내용·금액을 특정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는 일반 민간단체와 달리 시우회와 의정회에 대해서만 조례로 일반적·포괄

적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정회 조례도 효력을 잃게 됐다. 전남도의회가 올해 추경에 편성한 3000만원도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아예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어 조만간 조례가 폐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서울시 시우회는 전직 서울시 및 그 산하기

관 공무원이라는 공직 근무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단체”라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례 제정 없이 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988년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각각 매년 2500만원과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동우회는 시가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140여개 중 하나로 국제 행사 준비, 질서지킴기 홍보 활동 등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취소해달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진일기자 cki@kwangju.co.kr

장기방치 국유지 용도 해제... 지자체 반발

공원·도로·학교부지 등

정부가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전국 자치단체내 국유지인 공원·도로·학교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용도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오는 2020년 7월부터 장기(1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는 만큼 정부의 해제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국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2년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지는 87km이다. 여의도(2.9km) 30개 면적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정해제가 가능

한 국유지를 조사한 뒤 9월부터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간다. 해제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에 직접 매입을 권고한다.

광주에서는 하남 1택지지구내에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기재부 소유의 5945㎡(공시지가 기준 70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용도가 변경된 땅은 상업시설 조성, 정부청사 건설, 공공기관 임대 등 사업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정부와 지자체와 적정하게 배분할 방침이다.

자투리땅도 적극 매각한다. 대상은 면적 100㎡ 이하 또는 가격 1000만원 이하의 국유지로, 8km(여의도 2.8%)에 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2020년 시행되는 일몰제 법이 있는데, 그에 앞서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특히 공원 등이 장기간 방치된 것은 개발 예산이 없기 때문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말했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사회간접자본 사업 적정수준 투자 계속”

차대통령 대구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았다. 지난해 12월12일 이후 약 6년만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이나 당 대표 시절,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등의 시기에서 중요한 정국의 흐름이 나타나거나 정치적 각오를 다져야 하는 상황에서 대구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11월23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아관단일화라는 ‘고비’에 직면한 상황에서 ‘뒷받’을 다지고 대선필승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해 대구와 인근 지역을 방문한 것이 그러한 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정 최고지도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 대구수목원에서 열린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을 표창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옛 지역구였던 대구시 달성군을 찾아 대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에서 발파스위치를 눌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공식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공약가계부’로 지방의 우려가 큰 점을 감안,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과 투자도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OC 사업도 문제가 있는 사업 외에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투자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pkark@kwangju.co.kr



박수치는 박 대통령

5일 오전 대구수목원에서 열린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박람회장 분할 매각·장기임대 추진

사후활용 TF 구성... 9월 매각 완료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박람회장을 일괄매각 하는 대신, 나눠서 팔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사무실에서 사후활용 전략과 세부추진방안 마련 등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을 팀장으로 해수부 5명, 여수지방 해양항만청과 전라남도, 여수시 각각 1명, 전문가 그룹 4명, 박람회재단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태스크포스도 꾸려졌다.

정부가 사후 활용에 대한 지역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에

서는 민간 사업자 제공모드와 박람회장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 박람회장 매각 1차 공모를 했지만 부지 비용과 추가 건물 건립에만 적어도 5000억원 넘게 들기 때문에 마땅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 등은 박람회장 분할매각과 장기 임대 등을 건의했고, 정부는 “빅오 등 일부 시설을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

다”고 답했다. 원활한 박람회 사후 활용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할매각과 장기 임대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정부는 또 오는 7월 10일까지 격주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제공모드를 통해 오는 9월말까지 부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광기기자 kroh@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폐지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늘린다

기재부, 내년부터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폐지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율을 높기로 했다.

이는 일부 투기성 자본이 입지보조금을 활용해 필요 이상의 넓은 부지를 매입하는 반면 실제 설비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입지 금액의 15~45%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지방 이전 기업에 입지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은 3300억원 정도이며, 광주의 경우 7개 기업에 19억원이 지원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런 입지보조

금을 2014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보조금 신청은 불가능해지지만 이미 지원이 예정돼 있는 기업은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입지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투자촉진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총 24개 업체가 131억원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받았다.

기재부는 또 현행 지방투자촉진 사업 방식에서 총청권 등 수도권과 인접한 일부 지역에 보조금 예산이 집중되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 시 지역별 낙후도와 국고보조율 등의 반영 비중을 높여 형평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경매 뉴스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전수합니다.

교육비는 1,100만원이고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전수합니다.

단, 투자금이 1억이상 가진분에만 한합니다.

주, 오천옥선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취다와옥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북구 신인동 상업지역 6층로시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172억 최저가120억
- ▷서구 쌍촌동 2중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15억5천만 최저가13억3천만
-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2억4천만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1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및창고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토지매매

- ▷화순읍 연암리 자연녹지 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